

영암 F1 200일 앞으로

# 막강 스폰서+정부지원 부러운 호주 F1

멜버른=글·사진 김지을기자

‘2011 F1(포뮬러원) 월드 챔피언십’(Formula 1 World Championship) 시리즈 호주 멜버른 개막전을 지켜본 F1조직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첫 대회 치른 코리야 그랑프리 배움 점도 적지 않다.

◇든든한 스폰서=호주 그랑프리 공식 명칭은 ‘2011 F1 판타스 오스트레일리아 그랑프리(QANTAS AUSTRALIAN GRAND PRIX)’로, 호주 항공사인 판타스가 대회 타이틀 스폰서를 맡아 2년째 후원을 하고 있다.

호주 판타스 항공의 스폰서 규모는 대략 20억 수준으로, FOM(Formula One Management·포뮬러원 매니지먼트)과 대회 조직위원회가 수익을 나누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 큰 액수는 아니다.

더 큰 매력은 스폰서를 통한 F1 홍보 효과 크다는 점이다.

F1 조직위원회는 타이틀스폰서가 국내와 TV 방송에 F1을 활용한 광고를 내보낼 경우 얻어지는 효과가 대략 43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타이틀 스폰서가 인쇄 및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에 F1을 활용할 경우에도 80억원의 노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결국 타이틀 스폰서를 유치함으로써 얻어지게 되는 광고 노출 효과만 512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다양한 볼거리관광산업 연계=국내 유학생인 김은지(여·27)씨는 지난해 코리야 그랑프리에 이어 호주 그랑프리에서도 자원 봉사를 했다. 김씨는 “호주 그랑프리는 경주장 주변 볼거리가 많고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서킷이

## 50만명 유치 관광 연계 ‘남는 장사’ 경기장 주변 볼거리·이벤트 다양

공원에 위치해 경주 외에도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다, 6년간 주 정부 지원 아래 지속적으로 열리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면서 대회 기간 관람객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기업체들의 행사도 많다는 것이다.

김씨는 “한국 그랑프리도 경기 외적인 볼거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호주 그랑프리도 경기 기간 중 F1 이외에도 카레라컵, V8 슈퍼카 레이싱, 포뮬러5000, 르노 켈린지 등 수많은 레이스가 펼쳐지는 것도 관람객들이 경기장에 오랫동안 머물고 찾아오는 이유다.

애슐리 데이비스(Ashley Davis) 호주 그랑프리 조직위원회 운영본부장은 관광 산업과 연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주 대회도 대회만으로는 적자가 불가피하다”면서 “하지만 관광산업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 효과는 엄청나다”고 말했다. F1 대회 기간 호주 멜버른을 찾은 관광객은 대략 5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대회 기간 웬만한 호텔 속소는 동이 나고 인근 음식점과 술집은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북적댄다는 것이다.

◇정부의 전폭 지원=빅토리아 주 정부의 호주 그랑프리에 대한 애정도 대단하

다. 호주의 경우 40년 동안 F1을 개최해왔고 멜버른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16년간 대회를 치러왔다. 특히 오랫동안 대회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빅토리아 주의 전폭적인 지원 때문에 가능했다. 인근 아틀레티스에서 열린 호주 그랑프리도 멜버른에 유치하기 위해 주 정부는 지난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약 1600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지난 2009년에만 600억원 가량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회 지원금으로 나가는 돈이 수백억원에 이르는데도, 대회 만으로는 적자가 불가피한데도 개최를 하는 이유는 대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F1 대회의 경우 숙박, 관광, 쇼핑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1900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dok2000@kwangju.co.kr



지난 27일 ‘2011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호주 그랑프리’가 열린 빅토리아주 멜버른시 앨버트 파크 서킷(circuit·경주용 트랙)에서 좌석을 꽉 메운 관중들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 영암 F1 적자 줄이기 토론회

F1 코리야 그랑프리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협상을 통해 개최권료와 TV 중계권료를 낮추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관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목포대 전호문 교수는 29일 목포대에서 열린 ‘F1대회 지속 가능성과 잠재력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F1대회의 수지개선 및 지방 재정 부담 완화방안’이란 주제발표문을 통해 “경주장 건설 비용 등을 제외하고 작년 F1한국대회를 위한 순수 비용(개최권료·중계권료, 대회운영비)으로 795억원이 지출됐지만 수입은 입장권과 TV중계권 등

192억원에 그쳐 603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자발생 원인으로 F1경주장 건설 지연과 이에 따른 대회개최 불확실성, 국내의 언론의 부정적 보도, 대회운영법인(KAVO)의 신뢰성 상실과 마케팅 실패 등을 꼽았다.

적자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F1대회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강화 ▲F1마케팅 강화 ▲개최권료·중계권료 재협상 ▲경주장 상시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 교수는 특히 “작년대회 비용 중 개최권료와 중계권료 비중이 58.1%에 달할 만큼 부담이 가장 크다”며 “권한을 갖고 있는 F1매니지먼트(FOM)와의 협상을 통해 비용을 낮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적인 경제파급 효과와 국제적인 국가홍보 효과를 창출하는 F1대회에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개최권·중계권료 협상 다시해라”

박양우 중앙대 교수(전 문화부 차관)도 “올해 F1대회는 지속적인 전진이나, 단발성 실패로 끝날 것이냐를 결정 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F1대회가 J프로젝트를 포함한 전남도의 미래 대형투자를 유도하는 ‘방아쇠’가 돼야 하며, 현재 필요한 것은 미흡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성공을 위한 계속적인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 등 전국 12개 방사능측정소에서 방사성 요오드 검출 소식이 발표된 29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내 광주지방방사능측정소에서 연구원들이 공기중에 떠도는 핵종을 재검하는 장치를 살피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국내검출 ‘방사성 요오드 131’은

## 반감기 8일...안정화요오드 섭취 처방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우리나라에서도 제논에 이어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가 검출됐다. 검출된 요오드의 양은 극미량이지만 검출 자체만으로도 일반 국민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국내 검출된 요오드 131은=광주 등 전국 12개 지방방사능측정소에서 확인된 요오드는 ‘요오드 131’로 자연상태의 요오드인 ‘요오드 127’과 동위원소(양자 수는 같지만 질량 수가 다른 원소)다. 요오드 131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등이 핵분열 할 때 생성되는 물질로 반감기(방사성 핵종의 원자 수가 원래 수의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가 8.05일로 비교적 짧다.

◇요오드 131의 영향과 치료=요오드 131

은 대부분 호흡을 통해 체내로 들어와 갑상선에 모인다. 갑상선에 모인 이 물질은 갑상선이나 배타선을 방출, 장기가 피폭된다.

요오드 131과 같은 방사성 요오드의 경우 흡입하기 24시간 전 안정화요오드(KI)를 섭취해 갑상선에 요오드 양을 포화시킴으로써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방법을 사용한다.

당국은 29일 현재 약 13만명이 투여할 수 있는 분량의 안정화요오드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과다 투여할 경우 부작용을 겪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피폭 위험이 없다면 식품에 포함된 요오드를 성인 기준 하루 2.4mg 이상 먹지 않아야 갑상선 중독증과 같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연합뉴스

## “방사성·원전사고 안정대책 서둘러야”

### ‘광주·전남 안전한가’ 토론회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여파로 방사성 제논과 요오드, 세슘 등이 국내에서도 검출된 가운데, 방사성 물질의 확산과 원전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주최로 29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NGO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은 원전사고로부터 안전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인봉 민주노동당 광주시장 정책실장은 “일본 원전 피폭을 계기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핵발전소, 핵무기와 다르지 않다”는 주제의 토론에서 “수명 30년의 원자력발전소 1기를 폐쇄하려면 3200억~1조원이 든다”며 “안전성과 경제성에서 원자력발전소는 미래 에너지 정책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을 독립적 기구로 만들어 원자력에 대한 온전한 감시 체

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사고 비상대책위원장도 ‘핵에너지 정책의 현재와 전환’에서 “정부는 우리 원전이 일본보다 100배 이상 안전하다고 안심시키고 편서풍 영향으로 방사성 물질이 절대 우리나라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전국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며 “실시간 감시를 운운하던 정부는 4월이나 지나 검출 소식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크고 작은 원전사고가 잦았다”며 “원전 정책을 재생각할 만한 친환경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광원전 인근에 사는 김중국씨는 “방사능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조차 대피 훈련을 숙지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과 같은 방재 대책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별도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주민, 국회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해 원전의 안전성, 핵발전 정책의 전환 필요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승헌기자 yang@kwangju.co.kr

### 스마트폰에서 제대로 된 홈페이지를 보려면?

LOSE

일반홈페이지

WIN

모바일홈페이지

Tip. 일반적인 홈페이지는 컴퓨터 해상도에 맞게 제작되어 스마트폰에서는 컨텐츠의 이용이 자유롭지 못하여, 모바일 홈페이지는 스마트폰 해상도에 맞게 제작하여 편리함과 시인성을 극대화 합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문의 062-514-1144**

### 모바일홈페이지가 꼭 필요합니다.

**모바일홈페이지란?**  
모바일 홈페이지에 특화된 시설 및 디자인을 구현하여 QR코드 연동으로 쉽고 간편하게 소비자가 고객의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근 할 수 있게하는 온라인 홍보서비스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사례**

**ALL-IN-ONE SERVICE**  
올인원서비스는?  
한국전화번호부 어플 검색과 모바일 홈페이지 그리고 QR코드를 연동한 다양한 인쇄마케팅 홍보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